

## 진부한 북한의 대남비방 선전공세의 배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고발장” 문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

Online Series CO 12-32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지난 달 12일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내용의 소위 ‘진상고발장’을 발표했다. 작년 말 우리 정부의 김정일 조문 제한 조치를 비난하며 ‘국방위원회 성명’(12월 30일)을 내놓은 데 이어, 올 2월 2일에는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 등을 운운하며 국방위원회 명의로 공개질문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번 진상고발장도 그 연장선으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비난을 첨부한 것, 그리고 발표자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으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 상투적인 대남 비난과 적반하장의 책임전가 외에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금번 진상고발장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대조하며 살펴본 후, 북한이 대남선동선전 면에서나 국제사회에 대한 변명 용도로서나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일방통행의 통첩성 ‘서한정치’에 골몰하는 배경에 관해 추론해 본다.

### 진상고발장의 주장들

고발장은 다음의 네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1] 한국정부는 ‘6.15선언을 부정하는 등 북남관계 개선 노력에 악랄한 도발’을 하였다; [2] ‘극악한 체제대결 도발’을 감행하였다; [3]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기획 하였다; [4]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자행했다. 이상의 각 주장을 주제별로 살펴보자.

## [1] ‘6.15선언을 부정하는 등 북남관계 개선 노력에 악랄한 도발’

“남측 현정부는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고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모독하였으며, 선택포기를 내세워 북남대화를 전면 중단”하였다는 것이 북한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6.15 및 10.4 선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으며,<sup>1)</sup> 이러한 입장에서 6.15 및 10.4 선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계기 시마다 북한에 남북회담을 제의하여 왔다.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6.15 및 10.4 선언을 부정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2008년 3월 북한은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폐쇄하는 한편, 남북대화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개성공업지구출입제한 조치 등을 통해 교류협력의 공간을 차단하여왔다. 천안함 폭침 등 대남 무력도발,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남북경협발전의 기회를 가로막아 왔다. 더욱이, 최근까지 대통령을 포함하여 각 계 저명인사 및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지명 공격을 운운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남 비방중상 및 무력공격 위협을 자행해 왔다. 이처럼 6.15 및 10.4 선언을 유린한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인 바, 북한이 상기의 선언들을 ‘진정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발장은 대통령 및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로 모독하고 그것으로 북남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고, 이를 이어 통일부 장관이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는 어렵다고 공언하면서 대결정책을 공식선포하고 선언이행과 북남대화를 중단”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다. 대통령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더불어 살면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하며, 남북문제도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와 자원이 국가와 민족의 장벽을 넘어 움직이는 글로벌 시대로 민족과 국가라는 칸막이를 두르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 또한 대결정책을 선포하고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로 북한으로 정부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모든 남북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고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폐쇄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확대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북측이 3통, 즉 통행·통신·통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당분간 사업확대는 어렵다”는

1)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2008년 7월 11일, 대통령, 국회회견연설); “정부는 상호준중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남북 간에 맺어진 모든 합의들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혀왔다.” (2009년 6월 14일, 6.15 9주년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언도 전후 사정과 맥락을 단절한 채 왜곡 비방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도 한국 측에 전가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객 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엮었다”면서, “현대그룹 회장 평양방문 때 남조선관광객 신변안전을 최고 수준에서 담보한데 대해 민간업자와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나왔다”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중단은 명백한 북한의 책임이다. 민간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부가 그런 지역에 관광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이다. 확실한 그리고 ‘공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약속되어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인데, 북한은 사건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신변안전을 확보 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고수준의 신변안전 보장 담보’는 민간기업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국 간 협의와 공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책임 있는 국가도 민간인과의 약속을 담보로 자국 국민을 위협성이 상존하는 곳에 관광 보내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피해자인 한국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천안호 침몰사건을 조작하여 정세를 극단으로 끌고 갔으며 5.24 조치로 북남관계를 완전히 폐쇄”하였으며, “북남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는 회담을 이틀 앞두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도발하여 파탄”에 몰고 갔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국제사회가 참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거쳐 북한의 소행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국제합동조사단은 미국·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과 국내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우리군의 포격훈련에 대한 자위권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한국군은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인륜적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이 명백하다. 한국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남북교류를 중단하고자하는 북한 측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고발장은 “2011년 정초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제의 하였으나 《위장평화공세》니, 《통일전선전술》이니 하고 터무니없이 혈투음”으로서 남북대화 기회를 무산시켰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해왔으며, 대남 도발조치를 지속하면서 남북대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 재개를 원하였다면 정치적 선전을 위한 대화 제의보다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적절한 행동이다. 북한의 이중적이지자 돌발적 태도는 익히 잘 알려진 일이다. 2011년 초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으로 남북대화를 개최하자던 북한은 2011년 12월 말에는 느닷없이 “이OO 역적 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였다. 또한 북한은 작년 2월 어렵게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억지 주장만을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원한다면 남북대화 중단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며 면피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2월 조선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주민 수십명을 백주에 납치”하여 “근 1개월간 억류해 두고 귀순공작에 매달린 끝에 일부는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미송환 주민 4명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를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그들의 뜻에 반해 강제 송환하는 것이야말로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는 국제법상의 책무를 어기는 위법적 행위이기도 하다.

## [2] ‘극악한 체제대결 도발’

한국정부가 체제대결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두 번째 주요 주장이다. 한국 측이 “사상과 제도를 인정, 존중할 데 대한 북남합의를 짓밟고 우리의 체제에 도전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2008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자유민주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면서 세계면전에서 체제대결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등 체제대결 구도를 유도, 북한 체제 변경과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바라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직접 언급 한 바 있다.<sup>2)</sup> 한국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토대 위에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왜곡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체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한국의 내부문제에 간섭하고, 특히 한국 민주체제의 근간인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고발장은 한국정부가 “극히 불순한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였고, “2009년 통일부, 정보원 등 괴뢰모략기관을 총동원하여 그 무슨 급변사태를 가상의 극히 도발적인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은 체제대결 목적의 정책이 아니라 북한 측에 의해 악화일로를 걸어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고, 핵문제 진전상황에 따라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재건을 돕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우리 언론보도를 보고, ‘비상통치계획’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있는 정부 당국이 아닌 언론의 보도를 빌미로 위협적 언동을 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다음은 이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언급 내용이다.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2008년 4월17일, Washington Post 기자회견); “북한이 극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혹은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지금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2010년 1월 28일, BBC인터뷰); “북한이 어느 날 붕괴돼 통일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서로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생각,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제 제안하였다.” (2010년 9월 10일, 러시아 국영 TV 인터뷰)

통일세 안건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붓고 있다. “2010년 8.15 경축사라는데서 통일세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지난해 6월에는 통일이 한밤중에 도적처럼 올 수 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로 체제대결 흥심”을 드러냈으며 체제대결을 통한 흡수통일 의지를 보였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토대 위에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착실히 통일을 준비해 가는 것이다. 즉, 통일세 등 통일준비 논의는 체제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와 우리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장차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재원 마련 등 실질적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측 진의를 대결 구도 획책으로 왜곡하고 있다.

한국 측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노력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 함께 북인권결의안 조장에 앞장”, “미국, 일본을 끌어들여 북자유주간이라는 광대극을 벌리며 우리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 등 인권탄압 실태는 사실로 드러난 일이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호 받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엔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국제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동참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왜곡 및 항변은 스스로 인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한국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정도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심리모략방송을 재개하려 하였고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뼈라살포놀음을 연속 벌리는 도발도 감행”했다며 비방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군사분계선 부근 대북비방방송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급변사태’나 ‘체제전복’ 등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 당국이 직접 한국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분별한 대남비방, 남남갈등 조장을 위한 선전활동이 민간단체의 대응적 활동을 자극해 왔다. 북한과 달리 한국은 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하며 활동하는 한, 이들의 행동을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정부와 특정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악성 비방과 선전을 통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 시도해 왔다.

### [3]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세 번째는 한국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을지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호국 등 각종 명칭의 북침전쟁연습을 벌려” 놓고 있으며,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불장난소동을 일으켜 조선반도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과 3각군사동맹 조장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키졸브 및 독수리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연례적·방어적 훈련이다. 또한 훈련 전에 북한에 동 훈련계획을 통보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유엔사·중감위 훈련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두차례에 걸쳐 군사적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한국 언론에 대한 테러 협박까지 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 5도 우리 지역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민간인 대피’를 거론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sup>3)</sup> 적반하장의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 [4]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

한국 측이 북한의 최고지도부를 모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 인천과 경기도 양주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표적으로 삼고 마구 총탄을 쏘아대는 특대형 도발을 감행”하였고, “지난해 6월에는 전방부대들과 주변지역들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구호들과 현수막들을 내거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를 연이어 감행”한데다, “올해 2월에는 괴뢰군부대 내무반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상호존중의 정신을 침해한 것은 북한이다. 한국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여 비난하거나 비방중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국이 직접 나서 우리 국가원수를 지명 비난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말로 비방중상을 계속하고 있다.

북측 고발장은 한국정부의 김정일 장례식의 제한적 조문허용도 문제 삼고 있다. “민족의 대국상과 그후 저지른 반민족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특대형 도발”이라는 것이다. “대국상 관련 중대보도가 나가자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육·해·공군 부대들이 경계 및 전투비상사태에 들어가게 하는 등 기승을” 부리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12월 김정일 사망 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민간 조문단의 방북과 민간단체의 조전발송을 모두 허용하였다. 북한을 자극하거나 혼란을 조성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문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상례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북한이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한국의 비상경계조치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대해서까지 횡설수설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사니, 정치쇼니 뭐니 하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의”로 비난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년단 창립행사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쇼’ 등의 언급을 한 바 없다. 일부 언론에서의 보도를 한국정부의 언급으로 호도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독재체제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언론을 통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 언론사를 대상으로 좌표를 공개하며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국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를 자행해 왔다.

3) 북한은 “서해 5개섬과 그 주변에서 살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도발적인 해상사격이 시작되는 20일 9시전에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하라고 위협 (2012년 2월 19일 북 전선서부지구사령부 공개통고장)

노수희 사건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있다. “조의표시를 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를 판문점을 넘어서기 바쁘게 철창속으로 끌어갔는가하면...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 모독하는 불한당 짓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노수희씨는 한국의 국내법을 위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북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는 중이며, 이는 한국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서 북한의 거론은 내정간섭의 언어도단일 뿐이다.

## 의도분석

북한은 노동신문 등 선전매체 뿐만이 아니라, 공식기구의 성명, 고발장 등 다양한 도구를 동원하여 연일 한국 정부기관, 관계자 및 사회단체들에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 활동은, 이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의 왜곡 또는 일방적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얻고자하는 바는 무엇일까? 쉽게는 남남갈등 조장과 선거정국 개입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목표로 했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북적 성향을 가진 극소수의 인사를 제외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국 국민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외 주장들도 북한 측에 동조하는 세력의 외연을 넓히거나 세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무리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견인할 소지마저 있는 도발적 언사들로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이를 북한 측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국민 또는 국제사회를 향해 그간의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음을 강변하기 위해 비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측 비난 공세는 도발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므로써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어폭력으로 위협을 가해 한국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한국정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정부의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을 유인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발 위협을 가하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미 군사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외에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의 비난공세를 이해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선전 공세에 북한 측 각 기관이 몰두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북한의 비합리적인 도발적 비난 세례는 북한의 세습 및 정권 교체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즉,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는 내부지향적 정치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정치 각 행위자들에 있어 경쟁적 비방 공세는 다음 목표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충성경쟁이다. 각 행위자 및 기관은 정권교체 후 권력 및 자원 재분배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신지도부에 충성을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때리기’야말로 훌륭한 소재 거리가 아닐 수 없다. 내부적으로 줄 잇고 있는 김정운에 대한 충성맹세와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목표는 내부의 권력자들에게 향해 있으므로, 한국사회나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효과의 다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행위자 간 충성의 줄다리기의 악영향으로 대남비난전의 강도도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경쟁상대보다 더 강한 비난을 양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 최고지도부 역시 정권교체기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추종자들의 대남비방의 충성경쟁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김정일 사망 전 세습 준비가 몇 년간 북한의 군사 도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 및 미국의 억지 및 방어 태세 강화로 군사도발이 불러올 수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직접적, 물리적 도발에 갈음하여 선전전, 비방전에 몰두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상에서 지적했듯 최근 북한의 대남 비방전의 배경에는 과도기에 있는 북한 권위주의체제의 생존 논리가 따리를 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권력 구조의 속성이 변하거나, 과도기가 지나 세습정권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여야 대남비방공세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 내 각 행위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 완화할 것을 최고지도부에 진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은 자명하다.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 최고지도부의 결단 또는 강력한 국제행위자(즉, 중국 등)의 개입이 없는 한, 긴장고조를 노리며 한국을 자극하는 북한의 행태는 당분간 타성에 따라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내부 사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억제 및 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수밖에 없다.